

## 행정수도 이전 및 병역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교통난과 주택난 환경오염과 범죄 등 갖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린 결과입니다. 반면 지방은 공동화되고 심각한 발전의 장애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심화되고 지방민에게는 엄청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新행정수도 건설정책은 이러한 불균형현상에 과감하게 매스를 가하여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고자하는 국가 개조프로그램입니다. 과밀집중의 수도권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발전이 가로막힌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제 수도권집중형 국토를 지방분산형 국토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新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충청권은 수도로써 적합한 지형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구비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를 2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입니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상호연계발전이 가능하고 높은 개발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에는 新행정수도가 들어설 수 있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기관 교통망이 잘되어 있고 대청호와 금강이 있어서 물과 전력 공급이 충분하며, 정 부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 청남대 계룡대 국립묘지 생명과학단지 등이 있어 수도배후의 기본인프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1년 이내에 계획수립 및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후 2, 3년내에 토지 매입과 보상을 실시한 후 임기내에 부 지조성 및 인프라 구성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 겠습니다. 新행정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할 것 입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은 최대한 각 지역에 고루 분산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의 新행정수도 건설정책에 대해서 일부에서 오해 와 왜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든다는 주장입니다. 40조내지 50조원이 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 둔산지구 개발비용과 대전청사 건축비를 포함 하여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1조8천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감안 하여 전문가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본 결과는 예비비까지 포함하여 6조원정 도이면 新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십년이 걸린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 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임기내에 청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일 이후를 대비할 때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바 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중심체제로 통일이 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新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전략적 국가사업이 일부 의 오해와 왜곡에 의해서 좌절되어서는 안됩니다. 新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로써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의 新행정수도 건설 의지는 확고합니다. 저의 국가 비전과 국정운영의 철학에서 비롯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新행정수도 건 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권과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직속으로 민관합동의 新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위원회는 반드시 충청권 지역대표가 포함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 산하에 新행정수도입지선정분과위원회를 두어서 2003년 말까지 입지선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며, 위원회 사무국은 대전청사에 설치하여 新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제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은 역사의 물줄기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분권과 분산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할 것인가 아니면 반세기 동안 계속된 수도권 집중형의 숨막히는 개발정책을 계속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특히, 新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청권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뜨거운 지지와 환호를 보내주신 충남 북 그리고 대전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21세기형 병무제도 정착을 위한 노무현의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기 위한 근간은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에서 나옵니다. 안보는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적인 안전과 번영을 함께 일구어나가는 균형안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발적이고도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위협과 압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긴장완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식의 변화, 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예산제한성 등 병역의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21세기에 맞는 병역제도를 재정비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특권의 병역비리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국가의무에 대한 광범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등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은 새롭게 조성된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과학권의 건설 이룰 통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새로운 병무정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4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現 전력수준 의지를 위한 숙련기술 인력확보와 병역수급계획의 조정 등을 거쳐서 1차적으로 일반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안보환경 및 전력형성,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22개월까지 조정하겠습니다. 일반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現 전력수준의 하락을 막고 정보과학권을 건설하기 위해 현역병보다 6내지 12개월 뒤인 유급지원병체제와 과학기술사관 후보생제도를 도입하고 여군인력의 간부 정원의 10% 수준까지 확충하겠습니다. 그밖에 9개 정도의 항목이 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